

【 해외금융 뉴스: 복미 】

미 의회 정책기구, 중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압박 요구

- 미 의회 정책기구인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 (USCC·US-China Economic and Security Review Commission)는 의회가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중국의 환율, 무역 및 산업정책에 대응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함.
 - 위원회는 연차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자국경제 보호를 목적으로 무역정책을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WTO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의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중국은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위안화 절하를 인위적으로 유도함과 동시에 자주혁신 정책을 사용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의 기술이전을 강제하고 정부 조달시장에 외국기업 한도를 둠으로써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있다고 설명함.
 - 또한 2,640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적자가 미국의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주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중국의 WTO 가입이후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밝힘.
- 위원회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경우 중국이 미국채를 대량 매도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지나친 것이며, 미래 산업인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한 진입장벽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지적함.
 - 미국은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조 달러 상당의 미국채에 대한 대규모 매도를 우려하고 있으나 중국으로서는 달러화를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며, 미국채를 대량 매도할 경우 미국채 가격 하락으로 손실을 입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은 선불리 행동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함.
 - 중국은 미래 산업인 태양력, 풍력 등의 녹색에너지 산업에 대해 보조금과 진입장벽 등을 통해 외국 기업에 대한 전략적 불이익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녹색산업에 대한 수입을 늘리도록 의회가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 보고서는 마지막으로 중국의 군비강화가 태평양지역에 주둔해 있는 미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함.
 -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베트남 등과 영토분쟁 중인 남중국해 지역에 대한 위협이 증가되고 있으며 사거리가 1,000마일에 이르는 동방미사일 개발로 미군의 아시아 기지에 대한 위협이 증가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임.

(Reuters, 11/17)